# "안 낳고, 떠나고"… 제주 인구정책 새 판 짠다

### 초저출산·인구 자연감소 등으로 '인구 절벽' 가속
### 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4대 전략·66개 과제 발표
### "2026년까지 초저출산 회복, 생산연령 50만명 목표"

초저출산, 인구 자연감소 등 사실상 제주지역 '인구 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됨에 따라, 제주도가 2000억 원을 투입해 인구정책의 새 판을 짜겠다고 선언하며 추후 성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략별 주요 사업에 2075억 원을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전체 인구 대비 생산 연령 인구(경제활동 인구)의 구성비는 2020년 전체 인구의 70.5%에서 2025년 68.5%, 2030년 66.5%, 2035년 62.7%, 2040년에는 57.7%까지 떨어진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15.1%에서 2025년 18.9%, 2030년 23.1%까지 오르고 2035년 27.5%, 2040년엔 31.9%까지 갑절 이상 오르게 된다.

유소년 인구(0~14세)의 구성비는 2020년 14.4%에서 2025년 12.6%, 2030년 10.5%, 2035년 9.8%, 2040년 10.4%로 추락한다. 총 부양비 역시 크게 오를 전망이다. 2020년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인구는 41.9명에 그쳤지만, 2040년에는 73.3명을 부양하게 된다.

최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92명으로 2018년부터 초저출산이 지속돼 왔다. 2021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인구자연감소 역시 2021년부터 이미 시작됐으며, 20대 연령 인구의 수도권으로 유출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정책 목표를 '2026년까지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 이하)을 회복하고 생산연령인구(15세~64세) 50만명 도달'로 설정했다.

도는 ▷저출산대응 ▷경제활동 인구확충 ▷고령사회 대비 ▷지역공동체 조성 등 4대 전략과 66개 세부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지난 4월 26일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특히 148개로 분산된 인구정책의 세부사업을 해 66개로 집약·축소해 기존 기본계획과 연계하면서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등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또 주요 정책과제의 44%인 29개 신규사업에 10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신규사업 발굴과 확대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보면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제주형 초등돌봄 협력체계 구축 ▷RIS 혁신사업 ▷신산업 성장 견인 청년인력 양성 ▷제주형 마을중심 우리마을 돌봄센터 운영 ▷제주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 국민의힘, 4·3발언 논란 김재원·태영호 징계 절차

### 8일 2차 회의서 수위 결정

국민의힘이 제주4·3관련 발언이 논란이 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는 8일 예정된 2차 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황정근 중앙윤리위원회는 1일 브리핑에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 개시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사유에 대해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발언이 선거 때 표를 얻으려 한 것이었다는 지난 3월 12일 사랑제일교회 발언과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 했다는 지난 3월 26일자 강연, 제주 4·3 사건 기념식이 격이 낮다는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태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JMS 관련 SNS(소셜네트워크) 게시물, 제주 4·3 사건 관련 발언 등 두 가지가 징계 개시 사유"라고 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

## 특별행정기관 사무 재조정… "정부 지원 강화"

### 어제 특행기관 이관사무 재설계 방안 모색 워크숍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제주도청 환경마루에서 특행기관 이관사무 재설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강다혜기자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이관된 7개 특별행정기관(이하 특행기관)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기능과 사무 재조정 뿐 아니라 국가 환원까지 이어지도록 법개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제주도청 환경마루에서 특행기관 이관사무 재설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도로 이관된 정부 기관은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환경출장소, 제주보훈지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광주지방노동청제주지청 등 7곳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는 특행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강제 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관 사무 별로 ▷국토관리 ▷해양수산 ▷중소기업 ▷환경 ▷고용노동 ▷보훈 ▷노동위원회 등 7개 사무 이관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한 뒤, 각 사무의 정부 책임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사무 이관 이후 도로건설 문제로 쟁점이 가장 부각됐던 국토관리사무에 대해 민 교수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시에 제주도의 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강제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에 대한 재검토 뿐 아니라 '국가 환원' 필요성이 제기되는 보훈사무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할 계획이나, 이러한 조직 확대가 제주도에 긍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 문연교차에서

##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도민참여단

한 권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돼 2022년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조의 내용을 요약 제시한 것으로, '주민주권 구현'을 새로운 지방자치의 목적으로 정립했다.

주인으로서 주권의 행사는 '참여'를 전제로 하기에 이를 위한 수단으로 주민조례발안제, 주민참여예산제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 제도 이외에도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에서도 300명의 도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고, '도민 경청회'라는 이름으로 총 48회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연구에서도 205명의 도민참여단을 구성했고, 15분 도시의 현안 이슈 및 미래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 제주 중요 계획·수립 등 정책결정 과정 필수 운영
### 결과의 수용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등도 필요

위한 정책적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제주에서의 대표적 사례로는 2015년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 과정에서 도민계획단을 구성하여 제주의 새로운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을 선정한 것이 있다. 당시 도민계획단 100명과 청소년 계획단 22명을 구성해 총 7회의 회의를 거쳐 제주의 핵심가치를 정했다. 이후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는 154명의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총 5회의 회의를 통해 핵심가치와 비전을 설정했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론조사는 제주도민 300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명의 도민참여단을 구성했고 '개설 불허'를 권고했으나, 정책결정권자가 최종 '불수용'한 바 있다.

이러한 도민참여단 활용은 민선 8기에서도 지속 이어지고

제주지역의 중요 계획의 수립과 정책결정 과정에 필수적으로 '도민참여단'이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규모 또한 2015년 100명을 시작으로 300명까지 커졌다. 그러나 도민들이 결정한 '청정과 공존'이라는 미래비전은 사라졌고, '국제영리병원 개설 불허'는 최종 정책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의 민선 8기 도민참여단 운영 결과로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렇기에 단순히 '운영'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면피용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도민참여단의 뜻이, 곧 제주도민의 뜻이 되기 위해, 지역별·성별·연령 등 대표성을 갖춘 인원 구성은 필수적이며, 논의의 처음과 끝까지 과정의 투명성 확보도 잘 챙겨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민참여단의 결정 사항을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그대로 수용한다는 확답을 통해 결과의 수용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제거돼야 한다. 도민참여단 운영 자체가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수단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高氏 漢城府判尹 靈谷公
追遠·先世大祭 奉享

癸卯년 새 봄을 맞이하여 宗親 諸位의 健勝을 祈願합니다.
耽羅國 高乙那王의 후손 **靈谷公(大匡輔國崇祿大夫 漢城府判尹 耽羅18代 星主)追遠·先世大祭**를 다음과 같이 봉향하오니 많은 참례 바랍니다. (봉향 후 정기총회 개최)

○ 일 시 : **2023년 5월 5일(금) 11:00**
○ 장 소 : **고씨영곡공파 선세묘역** (당오름 : 안덕면 동광리 산68-2)

헌 관

초헌관 **고기철** (高基喆)

아헌관 **고경률** (高景律)

종헌관 **고덕휴** (高德休)

※ 우천시 탐라원 전사청
○ 연락처 : 상임부회장 성칠 010-9898-2277 / 총무이사 성근 010-8357-6172

**고씨영곡공파종친회** 회장 **고 점 유**

晉州姜氏 충정공파 입도조 묘제 봉행 및 정기총회 안내

진주강씨 휘 윤희 대사헌공 제주입도 제605주년을 맞아 **입도조 묘역에서 묘제**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종친 여러분께서는 많은 참석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23년 5월 5일 (금) 11시**
○ 장 소 : **입도조 선영**(애월읍 봉성리 산 40-4)
○ 참 석 : 진주강씨충정공파 종친 가족
○ 안 건 : 입도조 묘제 봉행 및 정기총회
○ 연락처
- 종 친 회 장 **강상주** 010-3692-8181
- 상임부회장 **강동우** 010-8661-0787
- 대정파회장 **강봉주** 010-8664-1957
- 공신파회장 **강태혁** 010-9781-7846
- 금악파회장 **강동진** 010-6691-1330
- 창천파회장 **강문택** 010-4699-1843
- 사 무 국 장 **강희경** 010-9840-0965

**진주강씨충정공파 제주도종친회**
회장 **강상주**

진주강씨제주염통악파 입도조 묘제 및 정기총회

푸르름이 짙어지는 계절 5월을 맞이하여 현종님과 가정에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입도시조 통정공 휘 위량의 499주기 **묘제 봉행 및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23년 5월 5일(금) 오전 10시**
■ 장 소 : **염통악 선영**(제주시 연동 1044번지)
※ 2세조 묘제는 당평대 선영에서 09시에 봉행함.
■ 연락처 : 사무국장 강동현 010-9487-9876
사업부장 강성무 010-3699-2179
청년회장 강봉수 010-2698-0913
※ 경품 및 어린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진주강씨제주염통악파종친회**
회장 **강순관**